

전남 상수도 안심 못해…운영·관리 문제 ‘수면 위로’

정부, 광주·전남 23곳 운영 실태 점검

목포·순천시, 영광·해남·무안·구례·신안 등 전남 7개 시·군의 상수도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20만명이 넘는 목포·순천지역 상수도 관리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목포시와 순천시, 영광군, 해남군,

목포·순천·영광·해남·무안·구례·신안 등 서비스 품질 평가 ‘미흡’

12곳 ‘C·D등급’ 광양·강진·화순 등 9곳 B등급…광주·담양 ‘A’

무안군, 구례군, 신안군 등 전남지역 7개 시·군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지역들은 상수도 관망 관리, 노후 상수관 개량, 운영·관리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지방상수도 160개, 광역상수도 7개 권역 등 총 167개 수

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했다.

기후부는 수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노후 상수관 개량 실적, 먹는 물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에너지 절감 노력 등 3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모두 A(최우수)~D(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평가는 ▲정수장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정수처리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7개의 감점 사항도 포함해 이뤄졌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우수)은 9곳, C등급(보통)은 5곳 등이었다. 광주시는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곳은 광양시와 영암·화순·강진·보성·완도·장성·함평·장흥군 등 9곳이었다.

여수시와 나주시, 고흥군·곡성군·진도군 등 5곳은 C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관망 관리와 시설 현대화, 서비스 품질 향상에 예전히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본 및 현장 평가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조치 명령도 내려진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장은 “우수사례 확산과 미흡 분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가로화단 보호 손길

10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경사로에서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가로화단 피해 방지를 위해 방풍벽을 설치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철도 결국 멈춘다…오늘 총파업 돌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전국철도노조는 “교섭 시작 30분여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정부 해결 약속이 없다면 교섭 재개가 불투명하다”면서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 2000여 명 중 필수 유지 인력 1만 2000여명을 제외한 1만 여명이다.

호남지방본부의 경우 노조 조합원 2700여명 중 필수 유지 인력 1200여명을 제외한 15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이 실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고속철도 통합, 성과급 정상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노조는 국토부의 SR과 코레일을 오는 2026년 말까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 발표에도, 기재부의 성과급 정상 지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정부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파업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철도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 대책 본부를 가동했다.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 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능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 5~10mm 비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에 5~1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를 보이겠다. 전남내륙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해안에도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1도로 전날보다 7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다. 13일도 영하 2~4도로 아침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천등,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자랑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농민수당 올리려고 벼 경영비 삭감 도의회 예산 심사, 어디서 잘못됐나

현장 협의 없이 기존 예산 깎아 충당…‘정치적 계산’ 비판도

전남도의회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 예산안 심감(광주일보 12월10일 5면) 후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예산안 삭감과 의결을 주도했는데, 정작 농민들이 쏟아내는 비난의 화살은 전남도로 집중되다보니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로 도지사 사퇴를 촉구하고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도지사 후보자들로 가세하는 모양새다.

도대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10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 결산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하면서 그만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증액하는 데 책정했다.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뒤 5년이 지난 만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소농의 기본 생활 측면을 위해서라도 올려줘야 한다는 의원들 목소리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흘러나왔다. 아예 전남도의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보이콧 하는 등 한껏 전남도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게 벼 경영안정대책비였다.

22만 3000명에게 1년에 6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 87억원으로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228억)를 쓰자는 말이 나왔다.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어 없는 돈을 새롭게 마련할 수 없으니 다른 사업비를 줄여 활용해

야 하니 도의원들은 228억원 중 절반인 114억 원을 잘랐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 등 의견 수렴은 없었다. 전남도와 시·군 매칭사업이다보니 시·군이 인상분을 감당해야 한다. 당장, 매칭비 확보도 힘들다는 게 시·군 입장이지만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전남도는 결국 예산안 변경에 동의했다. 하지만 삭감분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1000억원의 지방재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신안 와 곡성까지 포함된 농업인 기본소득에 들어갈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하는 부담감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패행으로 이어가는 부담감을 피해야 해 옮겨 겨자먹기식으로 따랐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안 변경안에 동의한 책임은 즉각적이었다.

10만원 더 받자고 ha당 60만원이 넘는 경영 안정대책비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은 도지사 사퇴 피켓을 내걸고 반발했다.

농민회 출신 도의원들이 있어 상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도의회 앞에서 전남도를 향해, 전남도의원을 대신, 도지사에게 화살을 들이댔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혜자가 20만여명에 달하는 공익수당 인상에 나서는 ‘정치 쇼’가 빛은 사태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인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 결정권을 쥐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

내장산 단풍터널